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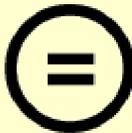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기업정책학석사 학위논문

공공조직의 정보공개 수준과
청렴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 기 오

공공조직의 정보공개 수준과 청렴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진수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기오

이기오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원장 김동욱 (인)

부위원장 이수영 (인)

위원 이진수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정
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며 공공기관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
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부
정부패 방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수
준이 청렴도 평가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160개 공공조
직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도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기관이 정보를 공개한 비율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
율 데이터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등급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보공개수용률을 보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
는데 조직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높고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
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원문공개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
데 조직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앙
행정기관과 교육청은 낮게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
였는데 조직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비교적 높고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낮
았다. 외부청렴도 역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조직유형별로는 공공기
관이 비교적 높고 광역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내부청렴
도는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유형별로도 뚜렷한 차별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조직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정보공개수용률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원문공개율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조직규모는 외부청렴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내부청렴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연령은 종
속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규모
는 종합청렴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내부청렴도와는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수준과 청렴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공개수용률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청렴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부청렴도에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적극성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정보공개수용률과 관련이 높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기관일수록 외부청렴도 설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정보공개수용률이 내부청렴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내부청렴도가 조직문화 및 인사와 예산업무를 중점적으로 측정해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용률과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원문공개율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문공개율의 표준편차가 크고 원문정보 공개 여부가 각 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기관의 청렴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조직의 청렴도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수들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수준만으로 청렴도를 규명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정보공개 수준이 외부청렴도와 종합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주인-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논의되었던 정보비대칭의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청렴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곧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조직은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정보공개수준을 높임으로써 청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정보공개, 청렴도, 투명성

학 번 : 2022-22910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이론적 고찰	6
1. 정보공개에 관한 논의	6
2. 청렴에 관한 논의	11
3. 청렴성과 정보공개	16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7
1. 청렴도에 관한 선행연구	17
2. 정보공개에 관한 선행연구	19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1
제 3 장 연구방법	22
제 1 절 연구모형	22
제 2 절 변수의 설정	23
1. 종속변수	24
2. 독립변수	31
3. 통제변수	33
제 3 절 연구가설	34
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34
1. 자료수집 방법	34
2. 분석방법	35

제 4 장 연구분석의 결과	36
제 1 절 기술적 통계분석	36
1. 독립변수	36
2. 종속변수	38
3. 통제변수	41
제 2 절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43
1. 다중공선성 분석	43
2. 다중회귀분석	55
제 3 절 분석결과 해석	72
 제 5 장 결론	 75
 참고문헌	 81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 기관	4
[표 2]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10
[표 3] 2021년도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10
[표 4] 연도별 원문공개율 현황	11
[표 5] 2021년도 기관별 원문공개율 현황	11
[표 6] 변수의 측정과 자료출처	24
[표 7] 외부청렴도 측정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	29
[표 8] 내부청렴도 측정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	31
[표 9]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36
[표 10]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38
[표 11]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41
[표 12] 피어슨 상관관계	45
[표 13]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	46
[표 14] 피어슨 상관관계	48
[표 15]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	49
[표 16] 피어슨 상관관계	50
[표 17]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	51
[표 18] 피어슨 상관관계	52
[표 19]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	53
[표 20] 피어슨 상관관계	54
[표 21]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	55
[표 22]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56
[표 23]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57
[표 24]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58
[표 25]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59

[표 26]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60
[표 27]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62
[표 28]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63
[표 29]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64
[표 30]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65
[표 31]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66
[표 32]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67
[표 33]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68
[표 34]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69
[표 35]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70
[표 36]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71
[표 37]	가설채택 여부	72

그림 목 차

[그림 1]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	7
[그림 2]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8
[그림 3]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9
[그림 4] 청렴도 측정에서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14
[그림 5]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15
[그림 6]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2021년)	15
[그림 7] 연구 모형	23
[그림 8]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측정모형	27
[그림 9]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	28
[그림 10]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	30
[그림 11] 연도별 독립변수 평균값	37
[그림 12] 조직유형별 정보공개수용률 평균값 추이	37
[그림 13] 조직유형별 원문공개율 평균값 추이	38
[그림 14] 연도별 종속변수 평균값	39
[그림 15] 조직유형별 종합청렴도 평균값 추이	40
[그림 16] 조직유형별 외부청렴도 평균값 추이	40
[그림 17] 조직유형별 내부청렴도 평균값 추이	41
[그림 18] 조직연령 평균값	42
[그림 19] 조직규모 평균값	42
[그림 20] 예산규모 평균값	4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조직의 부패 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매년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발표하고 있다.

공개된 청렴도 지수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패정도를 기관의 점수로 평가한 결과이므로 언론·국민·정치권 등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피측정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교육 및 취약업무개선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 청렴수준에 대한 별다른 측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은 해당기관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김임정, 2015).

반부패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021년 한국이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지난 5년 동안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2020년보다 1점이 오른 62점을 받아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에는 총점 54점으로 전체 51위였는데, 5년 만에 19위가 오른 셈이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는 2020년보다 한 계단 오른 22위로 나타났다. 앞서 2017년 7월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5개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부패인식지수 상승 추세도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가파르다. 지난 5년간 조사대상국 중 한국 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빠르게 높아진 곳은 아르메니아, 앙골라, 세이셸 3곳뿐이었고 오만, 몰디브, 잠비아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발전 수준이나 규모로 볼 때 OECD를 비롯한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나아지는 모양새다.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부문의 청렴도와 경제활동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눈에는 미흡하다. 부동산 투기인 부산 엘시티 게이트, LH사건, 대장동 관련 공무원과 법조인, 정치인 등 부정부패 문제, 각종 정부 및 지자체 관련자 비리, 특히 최근 장관 후보 인사 검증 문제로 터져 나오는 대학 의대 입시, 병역비리 문제, 전관예우 등 사회 지도층의 총체적 부정부패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MBN, 2021).

공공부문의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논의되지만, 많은 연구들은 주인-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정보비대칭을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리인(정부)과 주인(국민)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정보의 격차는 대리인(정부)의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공직부패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인(정부)이 목표 대치를 할 수 없도록 감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보수집과 관리의 독점권을 갖는 정부가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행정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제도로 제도화되었다(신승윤·한익현, 2022).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중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 20년 백서, 2017).

2013년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원문정보 공개 제도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는 내용

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정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20년 이상 시행되어 온 청렴도 평가와 정보공개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보공개수준이 청렴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부분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청렴도가 경영성과나 회계투명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공공조직의 정보공개 수준이 높을수록 청렴도 수준도 높을 것이다”라는 관심에서 본 연구는 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더 다양한 공공조직의 유형을 통해 정보공개수준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자 한다. 공공조직의 투명성과 관련이 깊은 두 제도인 청렴도 평가와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공공조직의 유형별 청렴도수준과 정보공개수준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두 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평가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정보공개 대상 기관 중 데이터 결측치가 없는 중앙행정기관(40), 광역자치단체(17), 교육청(17), 시장형공기업(13), 준시장형공기업(1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50) 총 160개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율 집계를 시작한 해인 2016년부터 최신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021년까지로 선정하여 연도별 청렴도와 정보공개수준의 변화 추이와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연구 대상 기관

구분	기관명
<p>중앙 행정 기관 (40)</p>	<p>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기업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p>
<p>광역 자치 단체 (17)</p>	<p>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p>
<p>교육청 (17)</p>	<p>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p>
<p>시장형 공기업 (13)</p>	<p>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p>
<p>준 시장형 공기업 (13)</p>	<p>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p>

구분	기관명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10)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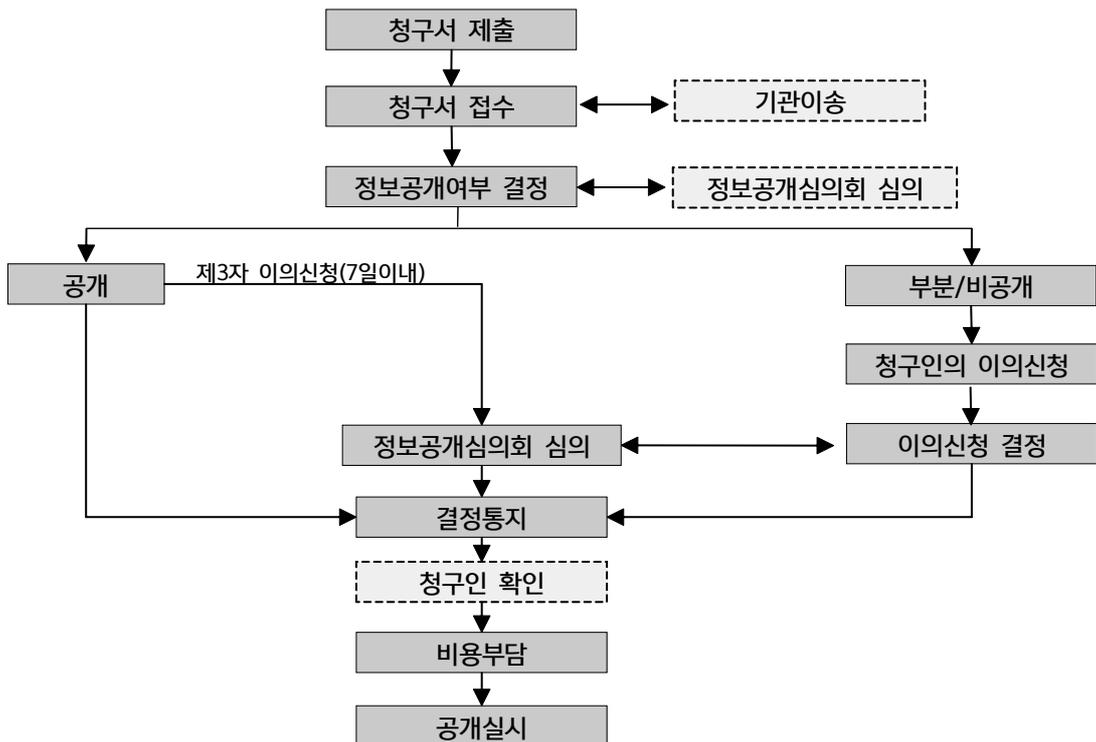
1. 정보공개에 관한 논의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정보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가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며 공공기관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국가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등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있다.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국민이란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용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는 사법(私法) 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公法) 상의 법인, 정부

출연기관 등과 종종, 동창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도 해당된다. 이 뿐 아니라 외국인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의 절차는 접수(또는 이송), 제3자(있을 경우) 의견 청취, 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등의 단계를 거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정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지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202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22).

[그림 1]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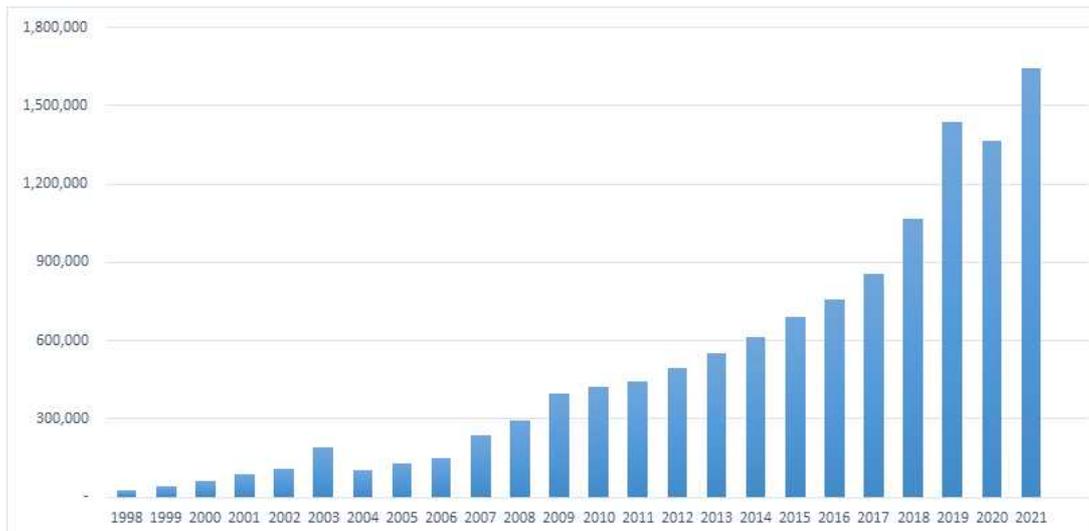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정보공개연차보고서(p.9) 재구성

2013년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원문정보 공개 제도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정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정보의 ‘목록’뿐만 아니라 ‘원문’까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간 ‘청구에 의한 공개’ 중심에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행정안전부, 202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22).

2) 공공조직의 정보공개 현황

행정안전부의 2022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는 1,642,959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2020년 1,367,166건 대비 20.2% 증가하였고,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의 26,338건 대비 약 62배 증가하였다.

[그림 2]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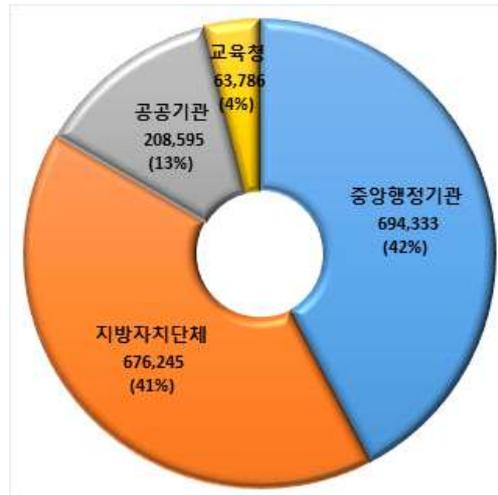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정보공개연차보고서(p.21) 재구성

2021년 접수된 총 1,642,959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

양 행정기관 694,333건(42%), 광역자치단체 676,245건(41%), 공공기관 208,595건(13%), 교육청 63,786건(4%) 순이다. 이는 국민들의 국정운영 및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정보공개연차보고서(p.22) 재구성

정보공개율은 95%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1년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1,642,959건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891,831건에 대하여 처리된 결과를 살펴보면, 78%(690,554건)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공개’되었고, 17%(154,261건)는 ‘부분공개’되었으며, ‘비공개’로 결정된 건은 5%(47,106건)이다.

[표 2]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건, ():%

구 분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 공개
2021년	891,831	690,554(78)	154,261(17)	47,016(5)
2020년	836,080	670,086(80)	121,521(15)	44,473(5)
2019년	846,953	690,557(82)	109,836(13)	46,560(5)
2018년	671,504	555,598(83)	83,128(12)	32,778(5)
2017년	563,597	477,870(85)	60,596(11)	25,131(4)
2016년	504,147	427,721(85)	54,091(11)	22,335(4)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정보공개연차보고서(p.25) 재구성

2021년도 기관별 정보공개율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93%('20년 92%), 광역자치단체 96%('20년 96%), 교육청 92%('20년 94%), 공공기관 94%('20년 93%)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높은 공개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2021년도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건, ():%

구 분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합 계	891,831	690,554(78)	154,261(17)	47,016(5)
중앙행정기관	298,154	199,503(67)	77,129(26)	21,522(7)
광역자치단체	449,173	372,001(83)	60,658(13)	16,514(4)
교육청	27,044	19,819(73)	5,231(19)	1,994(8)
공공기관	117,460	99,231(84)	11,243(10)	6,986(6)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정보공개연차보고서(p.26) 재구성

원문공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원문공개율은 64.7%로 2020년 (45.5%) 대비 19.2%p 증가하였고, 교육청,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연도별 원문공개율 현황

단위:%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2021년	64.7	51.0	63.1	64.8	63.8
2020년	45.5	49.2	62.4	45.1	61.2
2019년	41.3	44.6	56.5	39.7	60.4
2018년	29.9	45.4	63.5	27.0	54.3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정보공개연차보고서(p.38) 재구성

[표 5] 2021년도 기관별 원문공개율 현황

단위:건, %

구 분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합 계	58,107,259	37,614,320	20,492,939	64.7
중앙행정기관	212,119	108,099	104,020	51.0
광역자치단체	1,156,081	728,939	427,142	63.1
교육청	56,583,128	36,677,873	19,905,255	64.8
공공기관	155,931	99,409	56,522	63.8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정보공개연차보고서(p.38) 재구성

2. 청렴도 평가에 대한 논의

1) 청렴도 평가의 도입 및 연혁

청렴은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강조되어 오던 가치이자 현대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청렴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행태를 규율하는 원론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금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온정 연고주의를 배척한 공정한 인사업무, 공익을 추구하여 국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

청렴도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청렴도 측정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행정서비스고객의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다.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를 처리한 정도로 정의된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부패가 발생하는 분야와 그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패 현황에 대한 단순한 기술만으로는 부패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부패진단 결과를 반부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부패유형, 부패수준 및 추이를 파악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같은 부패진단 결과를 통해 공공기관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보다 중점적인 예방전략을 추진하는 등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예방적 반부패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청렴도 측정을 활용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의 추진은 공공행정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현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렴도 측정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추진은 공직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 청렴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 상승효과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

청렴도 평가는 1999년 9월 10일, <반부패특별위원회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어진 반부패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개발이 시작되었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세 차례의 시험 측정을 통해 2002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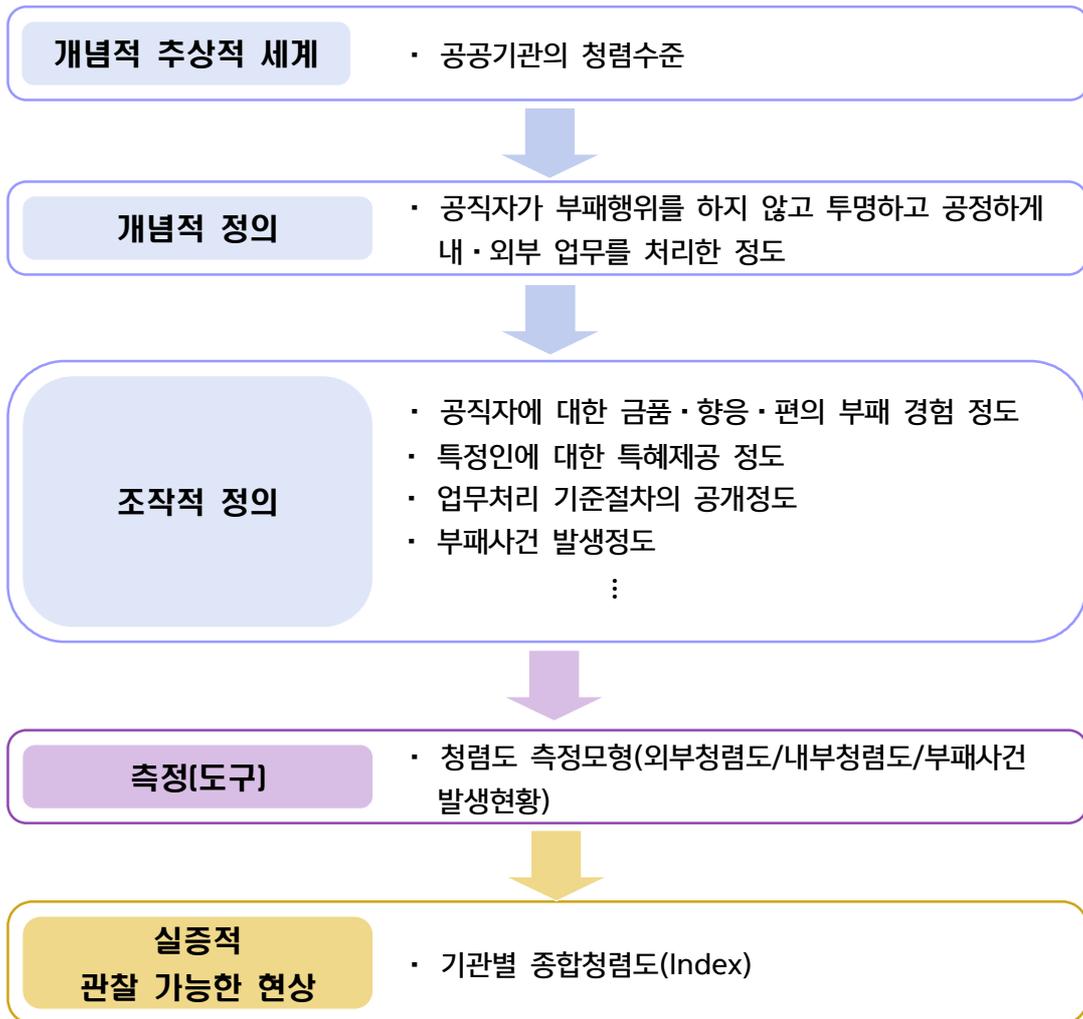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측정을 하였다. 초기에는 외부청렴도만 측정하다가 2007년도부터는 내부청렴도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산한 종합청렴도 공개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

2) 청렴도 평가의 대상 및 측정 방법

청렴도 대상 기관은 지속해서 확대해왔다. 2022년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43)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 시도교육청(17), 교육지원청(74), 공직유관단체(232) 광역지방의회(17), 기초지방의회(25), 공공의료기관(46), 국공립대학(35) 총 733개 기관은 청렴도 평가 대상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

청렴도 평가는 상당 부분이 설문문을 통해 진행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청렴도를 이루는 하위 지수에 대해 재 정의하고, 정의된 해당 지수들을 조작성 정의를 통해 측정 가능한 세부지표들로 구성한다. 이후 각 지표에 따른 항목들을 설문 문항화 또는 산식화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청렴도’라는 개념에 대해 체계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

[그림 4] 청렴도 측정에서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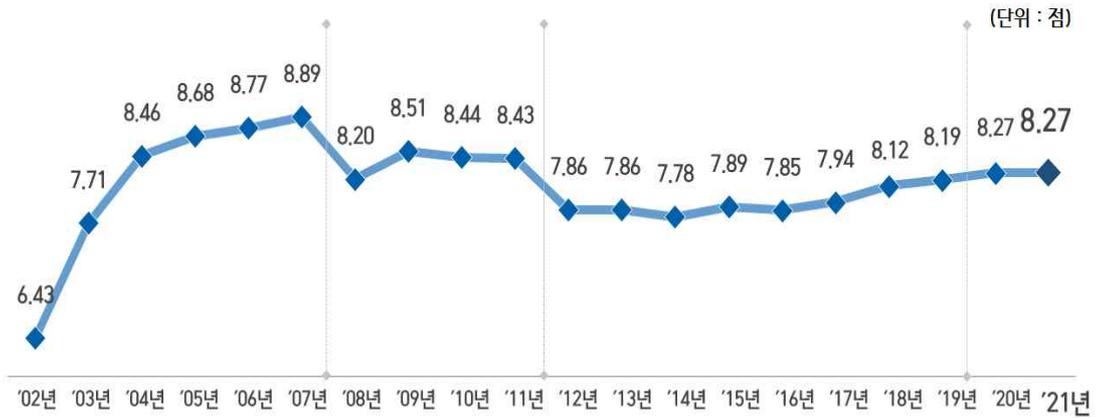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p.25) 재구성

기관별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의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종합하여 산출한 지표로서 국민,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체감한 청렴도와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종합지표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

3) 공공조직의 청렴도 측정 결과 추이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4년 연속 점수가 상승했으나, 2021년은 2020년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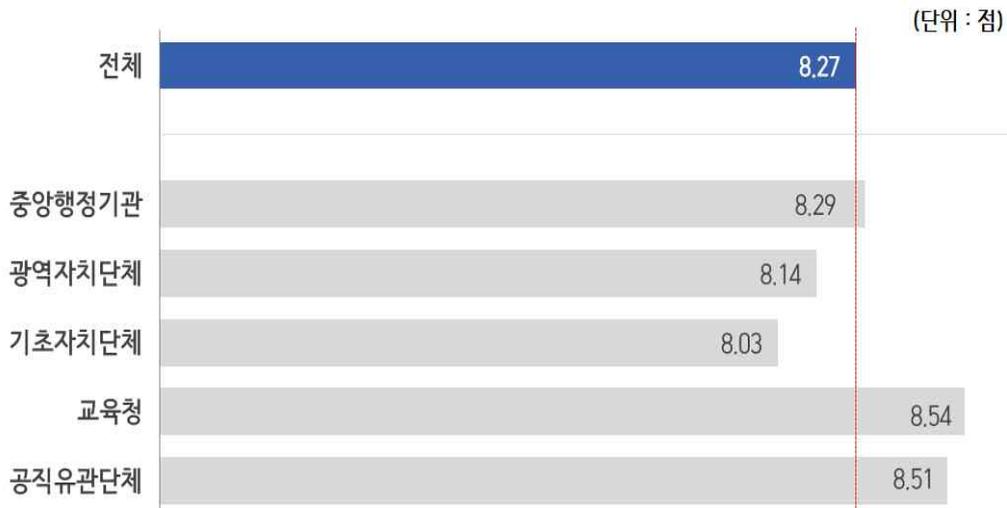
[그림 5]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2002~2021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8.54점)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8.03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6]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2021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3. 청렴성과 정보공개

청렴도(integrity)는 학술적으로는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정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문순영·강창현, 2012). 청렴도는 보통 공직자가 기관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부패행위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처리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국민권익위원회, 2013),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의 공공부문 청렴도란 부패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곽현근, 2010). 공직부패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사익을 취하는 행위로서(서인석·박형준, 2012), 공직부패가 확산되면 공적 업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며 정부업무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등 거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Botchwey, 2000). 한편 넓은 의미에서의 공공부문 청렴도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광의의 청렴도는 공직자들이 임무를 정직하게 수행하고 동료와 시민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조직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등의 행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Hoekstra et al., 2008), 협의의 청렴도인 반부패(anti-corruption) 이외에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Langseth et al, 1997; 이상범, 2012). 투명성은 민주적 행정윤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협력이나 합의의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결한 거버넌스 패러다임 하의 정책결정 상황이 늘어나면서 핵심 행정가치로 부상하였다(박홍식, 2001). 행정의 투명성이란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과정 등 공공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최진욱, 2007). 공공기관은 대리인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주인인 시민 보다 더 많은 정보를 획득·소유하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상철·성도경, 2002). 그런데 대리인의 이익이 주인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면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의 수익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무책임성, 권력의 남용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고객 지향적 관리와 정부 정보에의 용이한 접근 및 투명성 확보

를 정부 혁신의 주요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다(OECD, 1995; 유희숙·이자성, 2003). 이처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이다(장지원·문신용, 2004).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행정자치부, 2013), 행정 운영의 효율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각 국에서 도입한 것이다(Kickert, 1997).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장치로서 행정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며(이재완·정광호, 2011),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적 장치이다(Banisar, 2006). 즉, 투명성이 낮은 정책은 특정 집단의 사익추구 행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패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정책실패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투명성 제고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다(윤성일·권오영, 2017).

제 2 절 선행연구

1. 청렴도에 관한 선행연구

공공기관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쟁이나 파산 및 도산 위험의 부재로 인하여 본래 조직의 존재 목적을 벗어나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유은철·유홍림, 2014; 권오성 외, 2009). 그러나 공공기관은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는 역할 이외에도 법률을 준수하거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적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권오성 외, 2009), 공적역할 수행에 있어서 높은 청렴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김용래, 정왕국(2017)은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청렴도간 연관성에 관한 연구로 경영성과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종합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높은 부채 비율은 종합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사 관계 악화로 인한 파업은 안정된 노사관계로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보다 종합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일·권오영(2017)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27개 공기업과 31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부청렴성이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책무성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의 투명성 역시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훈·이세철(2015)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준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청렴도 평가 도입이후에 이익조정(회계 왜곡)이 증가하였으며, 청렴도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이익조정(회계 왜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렴도 평가에 회계처리 투명성은 포함되지 않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표본이 매우 한정된 소수의 공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공기업 각각은 산업별 특성이 매우 상이하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반대용(2017)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재무예산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외부청렴도는 재무예산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모두 종합청렴도는 양의 상관관계, 외부청렴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정보공개에 관한 선행연구

행정 투명성은 정보의 가용성 측면에서 공공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행정부 및 관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미하며 (Cucciniello & Nasi, 2014), 공공조직 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라는 소극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라는 적극적 차원에서 역시 접근되어야 한다(Birkinshaw, 2006). 주인인 시민과 대리인인 공공부문 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보공개라는 소극적 투명성의 확보만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제고를 보장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역시 투명성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신현태 외, 2020). 공공부문의 투명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크게 투명성의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장용석·송은영, 2008). 즉, 그동안의 투명성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전자정부를 통한 투명성 강화가 정부의 신뢰를 높이고 부정부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분석하거나(김선경·전민지, 2017; 최슬기·정광호, 2014) 행정 투명성이 공공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박나라, 2017; 박홍식·나현, 2010)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신승윤, 한익현(2022)은 시민과 정부 간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의 완화가 반부패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하에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수준의 정량 지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내·외부 청렴도평가 등급을 활용하여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운영수준이 외부청렴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원문정보공개제도의 수혜범위 확대가 광역자치단체의 반부패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이 수요하고 관심 있는 행정 정보를 광역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공개할 때 반부패 수준이 개선됨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수혜범위를 나타내는 전부공개건수가 오히려 내부청렴도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문정보공개율은 일부 외부청렴도 모형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

보공개와 반부패 수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연구 모집단이 기초자치단체에 국한된 한계가 있었다.

이현영, 정연경(2017)은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공개율과 청렴도 지수를 시기별·기관유형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시기는 2003년~2007년과 2008년~2012년으로 나누고, 기관 유형은 중앙 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전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명진, 문명재(2010)은 공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정보공개 회피요인과 부처기능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기관의 정보공개행태에 관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발표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기관의 정보공개행태는 기능 등 조직적 요인에 의하여 체계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규제 사용이나 집행업무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된 업무의 경우 정보공개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와 같이 복잡하거나 비가시적 가치를 다루는 기관일수록, 또 업무적 폐쇄성이 높을수록 정보공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철(2009)은 정부기능 및 행정부처별 특성에 따른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는 권력부서이면서 기획업무수행 기관일수록 회피 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소극적 정보공개행태를 비권력부서이면서 집행업무수행 기관일수록 공개 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적극적 공개행태 경향을 보였다.

이재완과 정광호(2011)는 2007~2009년 229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배구조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대당 의석비율과 진보정당 의석비율이 정보공개 수용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거 경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표율과 재정자립도, 중소도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권의식

을 가진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와 지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아 물적 자원면에서 여유가 있으면 정보공개 수용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나라(2017)는 투명성이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과 고객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측된 투명성과 인식된 투명성 모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관측된 투명성과 인식된 투명성이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조직들로,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도 달성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사회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국민의 관심과 투명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는데, 이들 역시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속변수인 고객만족도의 경우, 원점수가 제공되는 기관이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분석 대상의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기 위해 전체 기관을 상대로 공개되는 고객만족도 등급을 사용해 기관간의 변별력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들은 청렴도가 경영성과나 회계투명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청렴도와 정보공개 수준의 관계에 관한 이현영, 정연경(2017)의 연구는 10년 전 소수의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양적, 질적 정보공개율과 정보공개 처리기간이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최근에 이루어진 신승윤, 한익현(2022)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모집단을 기초자치단체로 국한해 공공조직 전체의 청렴도와 정보공개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등 공공조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이 공공조직 유형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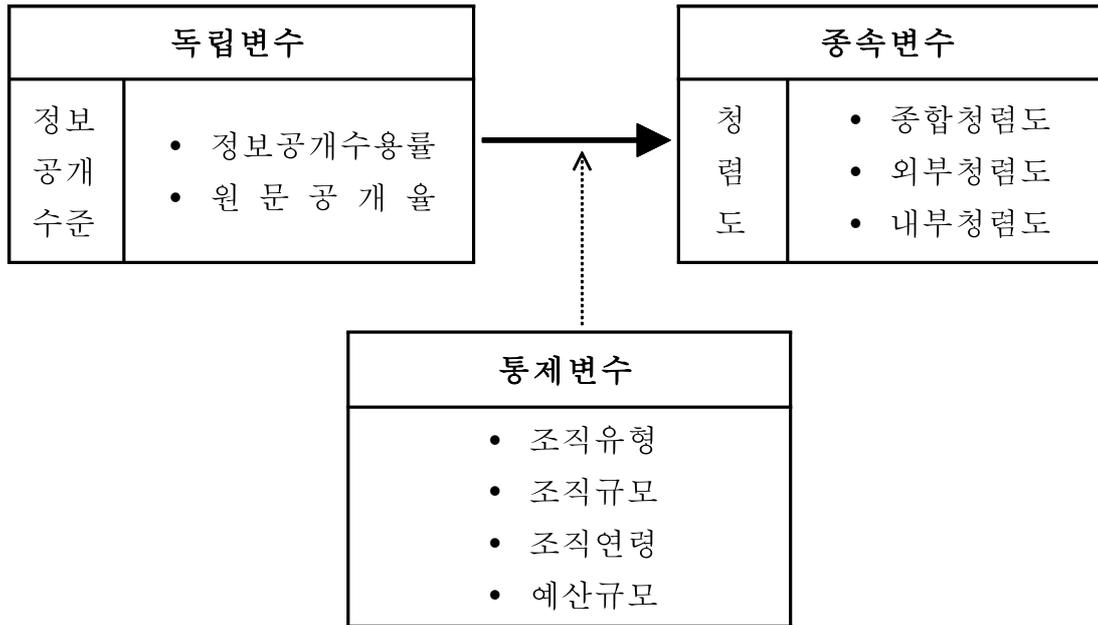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수준과 정보공개수준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질적 분석에 앞서 공공기관의 유형별 청렴도와 정보공개율의 차이와 각 기관의 연도별 청렴도와 정보공개수준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 청렴도와 정보공개수준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 공공기관의 청렴도와 정보공개수준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정보공개수준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에 따른 정보공개율과 원문공개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청렴도수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의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를 사용했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해 조직유형(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를 적용하여 분석틀을 확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7] 연구모형



제 2 절 변수의 설정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속한 변수들의 측정방법 및 자료 출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 변수의 측정과 자료출처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자료출처
종속 변수	종합청렴도	청렴도 측정결과 (1등급=5, 2등급=4, 3등급=3, 4등급=2, 5등급=1)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acrc.go.kr)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독립 변수	정보공개 수용률	$\frac{(\text{전부공개건수})+(\text{부분공개건수} \times 0.5)}{\text{정보공개청구건수}} \times 100$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원문공개율	$\frac{\text{공개원문 건수}}{\text{공개대상원문 건수}} \times 100$	
통제 변수	조직유형	중앙행정기관=1, 광역자치단체=2, 교육청=3, 공공기관=4	정보공개포털 분류 적용
	조직규모	ln(2021년 기준 직원수(명))	행정안전부, 교육부, 알리오
	조직연령	2021-설립년도	알리오 등
	예산규모	ln(2021년도 예산(억원))	행정안전부, 교육부, 알리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매년 평가해 발표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측정결과인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사용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 등을 정확히 측정·진단해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급 기관이 자율적인 반부패 개선 노력을 적극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별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는 청렴도 측정을 통해 측정·진단하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촉진·지원하는 평가체계가 그것이다. 또, 매년 측정·평가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고, 홍보·확산해 각급 기관의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청렴도 향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을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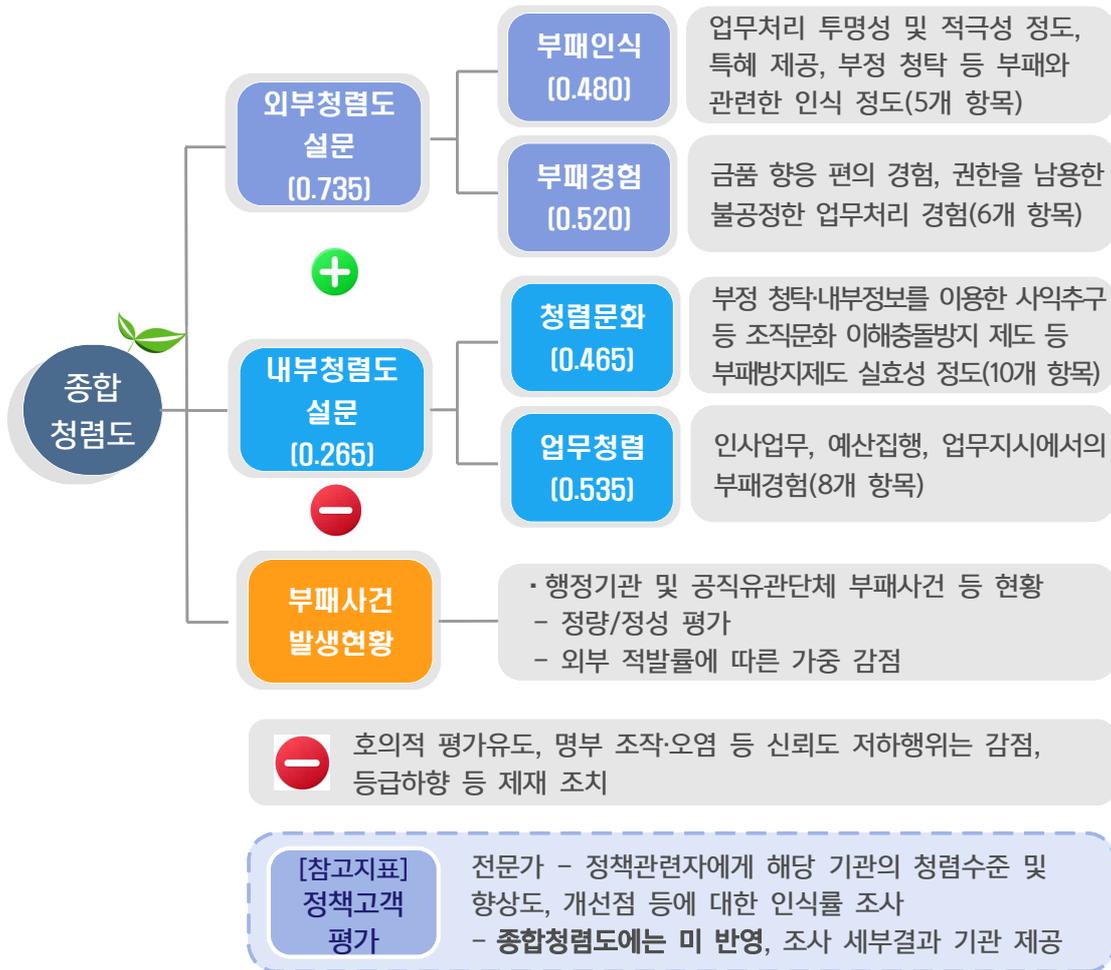
본 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에 근거해 2021년 기준으로 총 592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206,306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5단계 등급으로 평가결과를 발표하는데 계량분석이 가능하도록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은 5점, 2등급은 4점, 3등급은 3점, 4등급은 2점, 5등급은 1점으로 변환해 사용했다.

1) 종합청렴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을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해당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조직문화와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실제 발생한 부패사건을 점수화한 부패사건 발생현황으로 구분되며,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조사표본 오염·관리행위 등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 하향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점수에 해당 영역의 가중치를 곱해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전체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하여 최종 점수를 도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각 기관별 종합청렴도 점수를 기반으로 기관별 청렴도 등급이 산정된다. 기관별 등급은 각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을 반영해 분류한 기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해 기관유형별 등급구간을 산정하고, 기관의 청렴도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산정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음(청렴함)을 의미한다. 1등급은 각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보다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점수가 높은 기관에 부여되며, 5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에서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를 뺀 점수 미만인 기관이 해당된다. 다만, 기관유형 내에서 5등급이더라도 청렴도 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기관 분포에서 4등급 기준 이상인 기관은 4등급을 부여하여 기관유형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림 8]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측정모형(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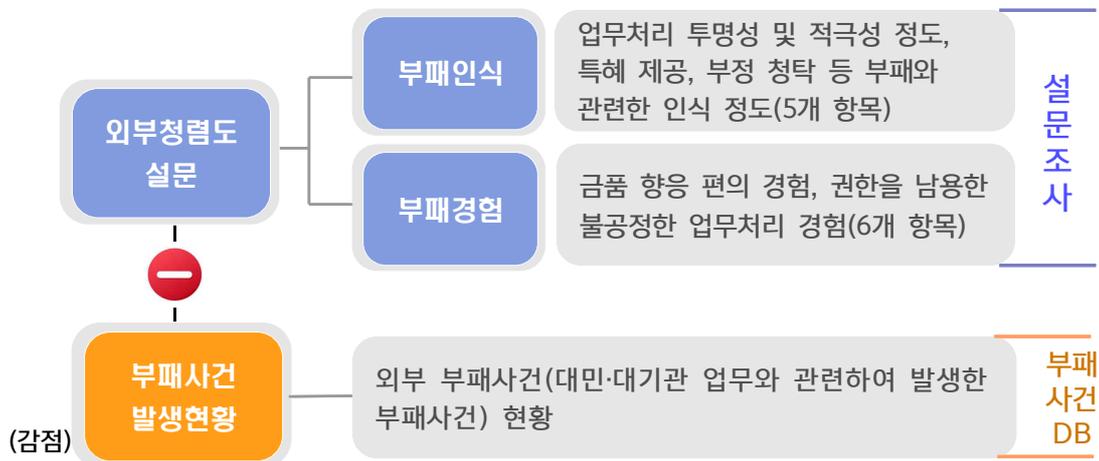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p.55) 재구성

2)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금품·향응·편의의 요구·수수 등과 같은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은 일반국민이 아닌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을 의미하며, 대민 업무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민원인이, 대기관 업무일 경우에는 상대 공직자가 해당된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

과 부패경험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 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된다. 부패인식은 국민이 인식하는 업무 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적극성, 부당한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의 부패수준을 의미하며, 부패경험은 국민이 경험한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공직자의 요구나 수수 등의 부패수준을 의미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

[그림 9]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p.52) 재구성

[표 7] 외부청렴도 측정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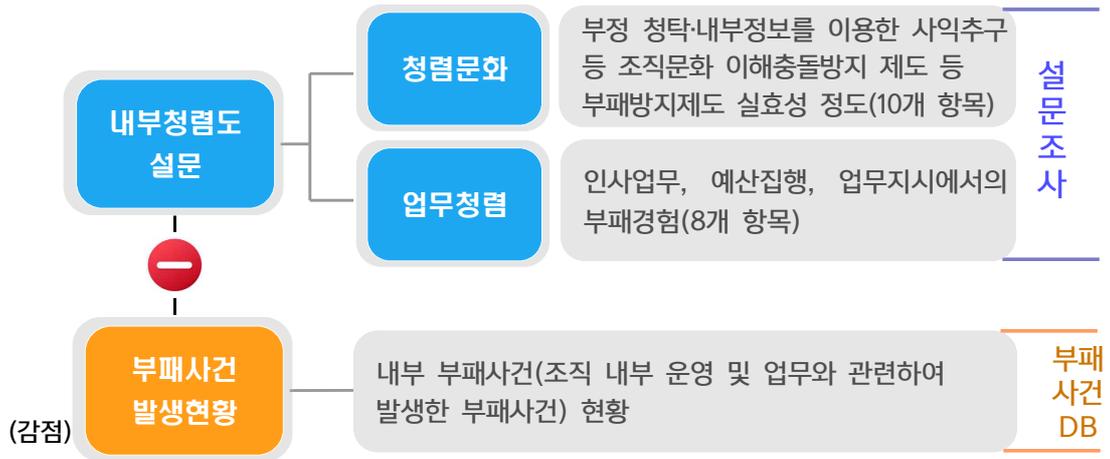
측정부문	세부항목(가중치)
부패인식 (0.480)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0.249)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0.204)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240)
	업무처리의 투명성 (0.156)
	업무처리의 적극성·책임성(적극행정) (0.151)
부패경험 (0.520)	금품 경험률 (0.126)
	향응 경험률 (0.113)
	편의 경험률 (0.107)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296)
	금품·향응 경험규모 (0.283)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경험률 (0.075)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p.26)
재구성

3)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된다. 청렴문화는 조직 내부구성원이 인식하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특혜제공·부정청탁 등 조직문화부패수준과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의미하며, 업무청렴은 인사업무·예산집행·업무지시 등 내부 업무의 수행에 있어 구성원들이 경험한 부패수준을 의미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

[그림 10]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p.53) 재구성

[표 8] 내부청렴도 측정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2021년 기준)

측정부문		세부항목(가중치)
청렴 문화 (0.465)	조직 문화 (0.631)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0.161)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영향력 행사 (0.161)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67)
		업무처리 투명성 (0.133)
		업무처리 책임성 (0.130)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0.135)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0.113)
	부패방지 제도 (0.369)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364)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447)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0.189)
업무 청렴 (0.535)	인사 업무 (0.413)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0.196)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415)
		금품·향응·편의 경험규모 (0.389)
	예산 집행 (0.330)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0.20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빈도 (0.420)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규모 (0.371)
	업무지시 (0.257)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업무지시 경험률 (0.282)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업무지시 경험빈도 (0.718)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p.28)
재구성

2. 독립변수

이 논문에서 독립변수는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수용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공개수용률과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의 공개 정도를 나타내는 원문공개율을 사용했다.

1) 정보공개수용률

정보공개수용률은 당해연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기관이 정보를 공개한 비율을 말하는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은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정보공개수용률은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해당 정보에 대해 전부 또는 부분 공개한 경우에 차이를 두어 측정하고자 한다. 청구된 정보를 전부 공개한 경우 1을 부여하고 일부만 공개한 경우 0.5를 부여해 정보공개수용률을 산출하였다.

$$\text{정보공개수용률} = \frac{(\text{전부공개건수}) + (\text{부분공개건수} \times 0.5)}{\text{정보공개 청구건수}} \times 100$$

주 : 부분공개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평균적으로 0.5 수준을 이룰 것으로 가정하고 부분공개에 대해 0.5의 비중으로 반영함(이명진·문명재, 2010)

2) 원문공개율

2013년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원문정보 공개 제도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정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정보의 목록뿐만 아니라 원문까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간 청구에 의한 공개 중심에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문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2015년 3월에는 시·군·구 및 교육기관, 2016년 3월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왔다.

원문공개율은 공개대상 문서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구한 값이다.

$$\text{원문공개율} = \frac{\text{공개원문건수}}{\text{공개대상원문건수}} \times 100$$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청렴도 이외에 종속변수인 공공조직의 정보 공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유형,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1) 조직유형

공공조직의 유형에 따라 정보공개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연차보고서상에서 분류하는 기준을 참고해 공공조직을 각각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통제변수로 반영했다.

2) 조직규모

기관의 규모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각 기관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기관규모를 통제변수로 정했다. 정원은 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어 실제 분석에서는 정규분포로 만들기 위해 자연로그값을 사용했다.

3) 조직연령

기관의 연령에 따라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 기관연령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기관의 연령은 2021년을 기준연도로 설립연도를 뺀 값으로 산출했다.

4) 예산규모

기관의 집행예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했다. 예산은 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어 실제 분석에서는 정규분포로 만들기 위해 자연로그값을 사용했다.

제 3 절 연구가설

본 연구의 주제는 공공조직의 정보공개 수준과 청렴도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청렴도는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로 나누었고, 정보공개 수준은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로 나누어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기관은 투명한 업무 처리로 청렴도 수준도 높을 것이라는 대가설을 정하고 아래와 같은 하위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이 높을수록 종합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2.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이 높을수록 종합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3.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이 높을수록 외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4.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이 높을수록 외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5.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이 높을수록 내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6.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이 높을수록 내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기관별로 분류해 수집하였다.

독립변수인 정보공개수준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산출하고, 원문공개율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검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통제변수인 조직유형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분류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으로 정의했고, 조직규모는 행정안전부의

e-나라지표와 교육청, 알리오에 나와 있는 각 조직의 임직원 현원을 기준으로 수집했다.

조직연령은 각 조직의 설립연도를 확인하여 2021년을 기준으로 계산했고, 예산규모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서 수집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과정을 통해 STATA SE17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변수들간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독립변수, 종속변수연구가, 통제변수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 4 장 연구의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적 통계분석

1. 독립변수

독립변수로 설정한 정보공개수용률의 평균은 82.989, 표준편차는 10.006, 최소값은 30.379, 최대값은 100으로 나타났다.

원문공개율은 평균이 56.866, 표준편차는 19.579,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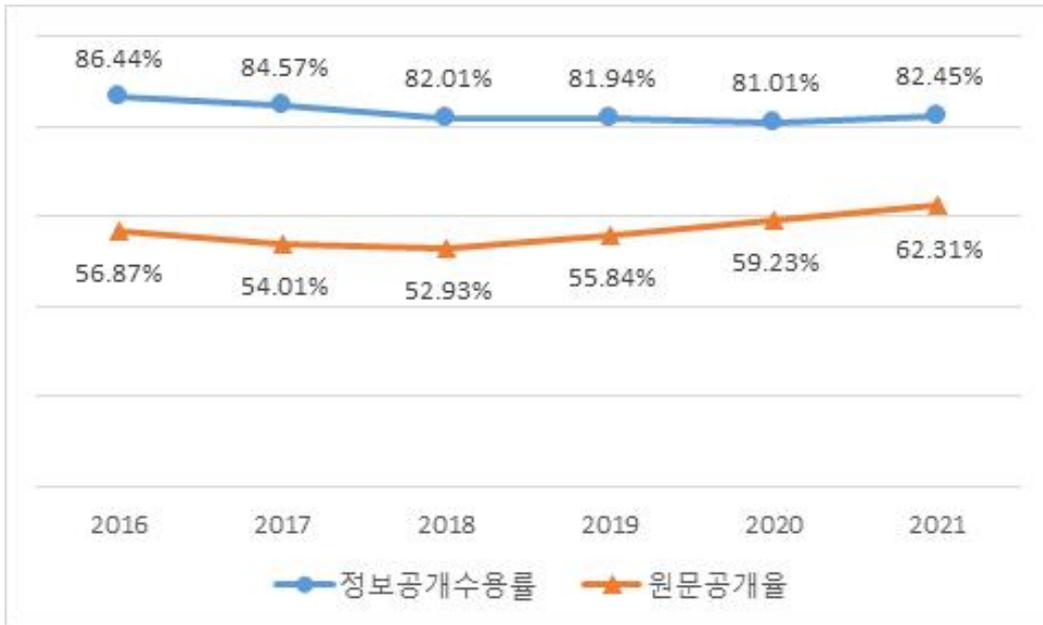
[표 9]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N=96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보공개수용률	82.989	10.006	30.379	100
원문공개율	56.866	19.579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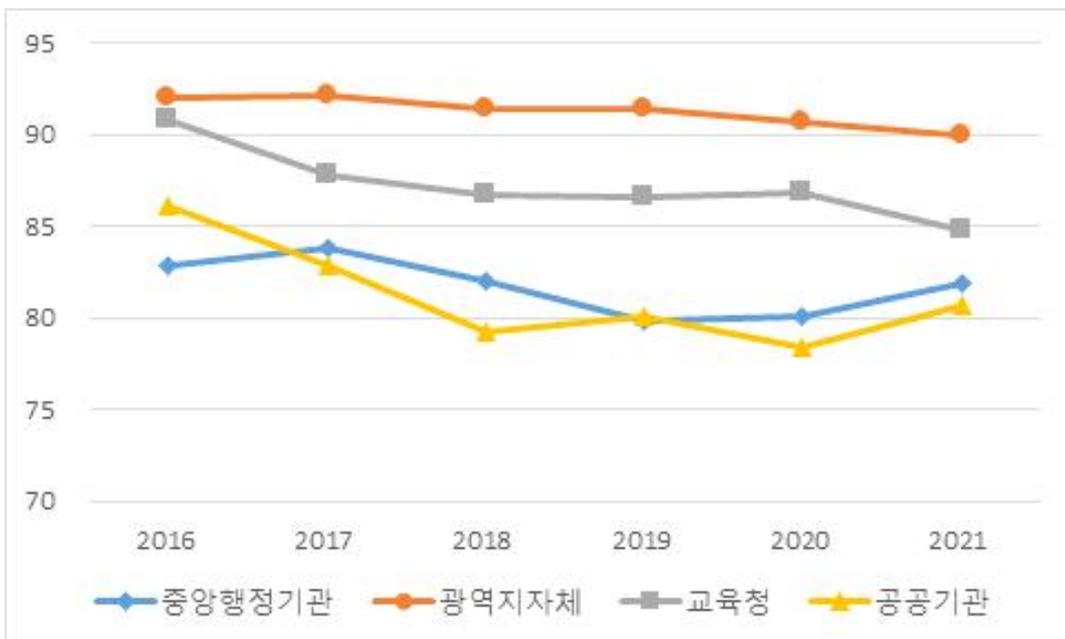
연도별 정보공개수용률의 평균값은 [그림 11]과 같이 2016년 86.44%에서 2020년 81.01%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원문공개율은 2018년 52.84%에서 2021년 62.31%로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11] 연도별 독립변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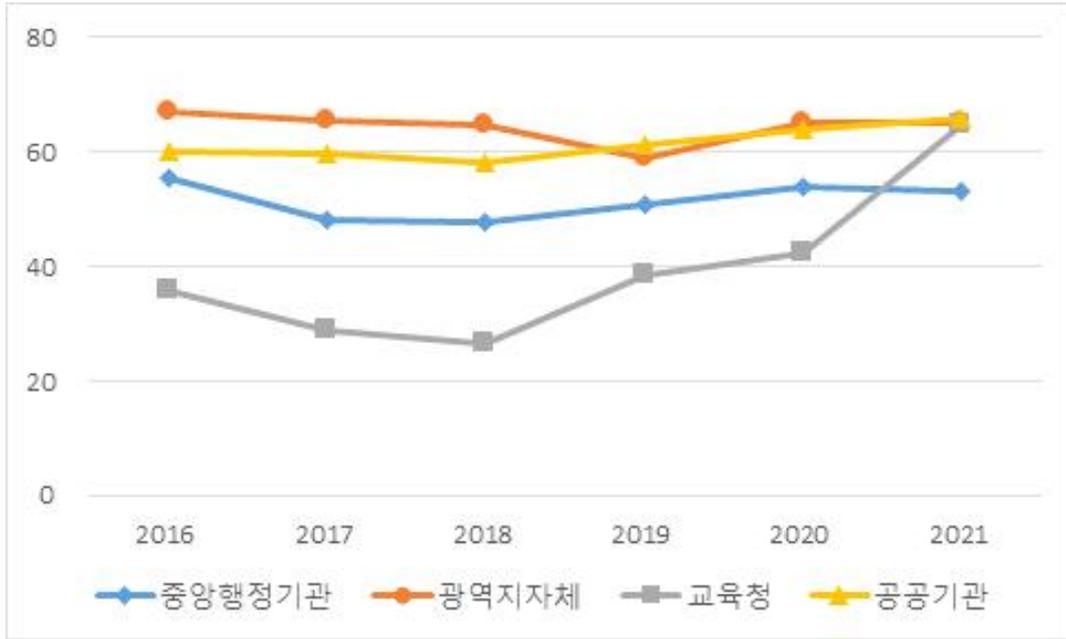
조직유형별 정보공개수용률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높고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12] 조직유형별 정보공개수용률 평균값 추이



조직유형별 원문공개율은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은 낮게 나타났다.

[그림 13] 조직유형별 원문공개율 평균값 추이



2. 종속변수

종속변수로 설정한 청렴도 평가결과는 종합청렴도의 평균은 3.012, 표준편차는 0.942이고, 외부청렴도의 평균은 2.996, 표준편차는 0.925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는 평균이 2.949, 표준편차는 0.967이었고, 모든 종속변수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로 나타났다.

[표 10]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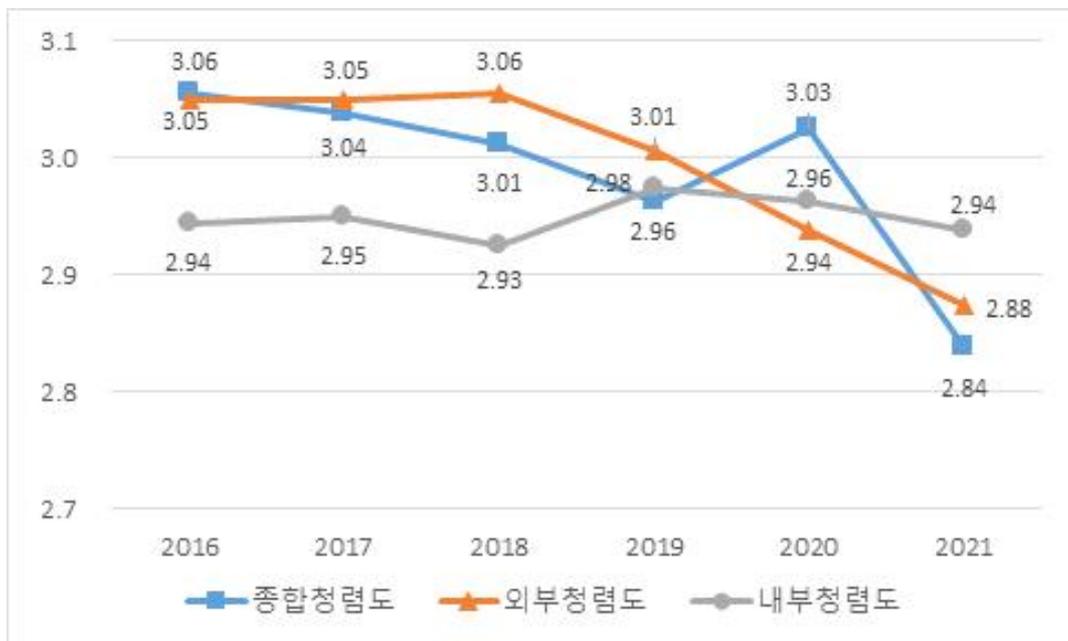
N=96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합청렴도	3.012	0.942	1	5
외부청렴도	2.996	0.925	1	5
내부청렴도	2.949	0.967	1	5

연도별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2016년 3.06에서 2021년 2.84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외부청렴도 역시 3.05에서 2021년 2.88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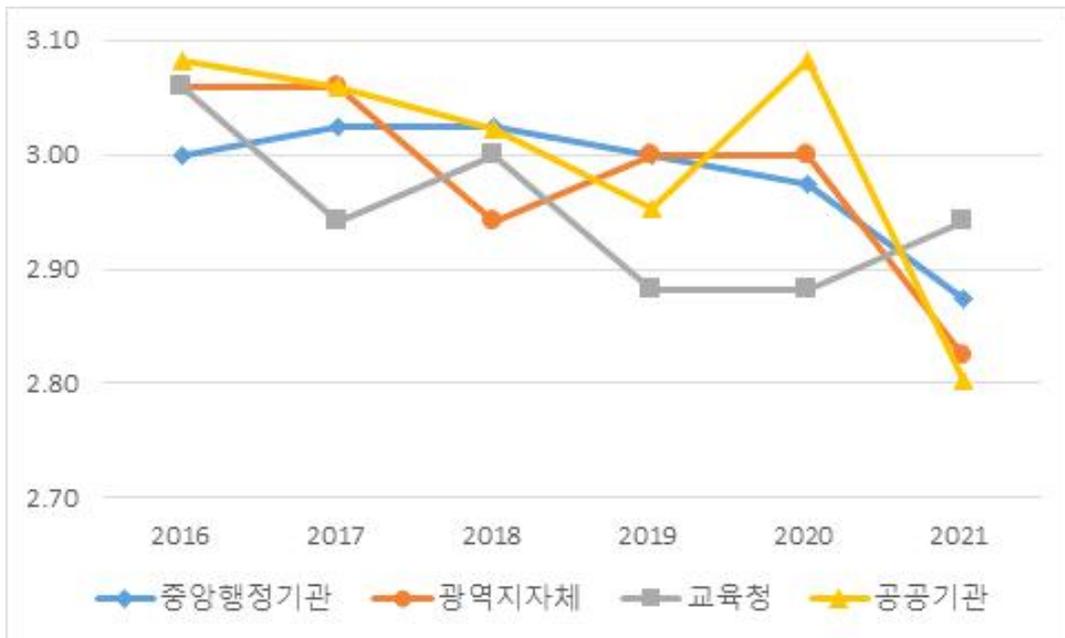
내부청렴도는 2016년 2.94에서 2021년 2.94로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연도별 종속변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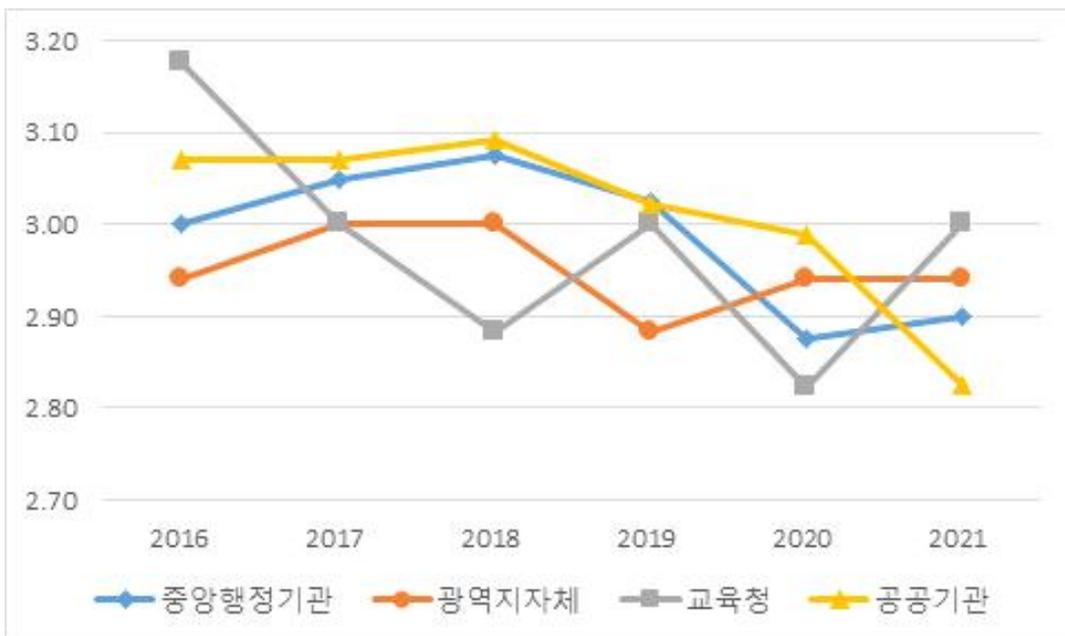
조직유형별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비교적 높고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15] 조직유형별 종합청렴도 평균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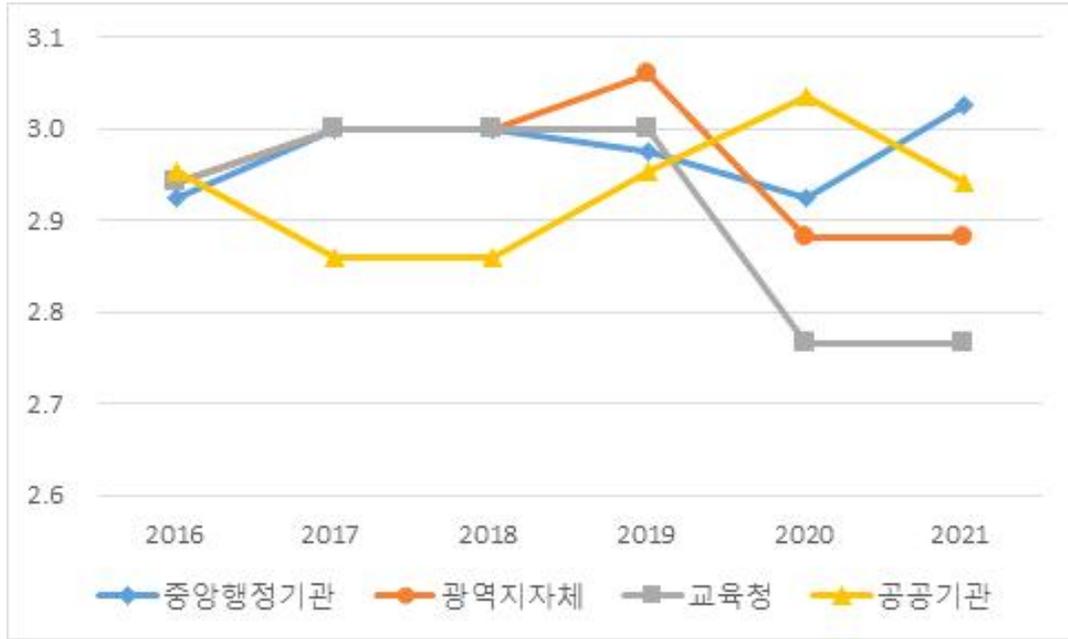
조직유형별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이 비교적 높고 광역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16] 조직유형별 외부청렴도 평균값 추이



조직유형별 내부청렴도는 [그림 17] 과 같이 조직유형간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조직유형별 내부청렴도 평균값 추이



3. 통제변수

종속변수로 설정한 조직연령의 평균은 36.806, 표준편차는 21.353, 최소값은 0, 최대값은 91으로 나타났다.

조직규모는 평균이 7,950.643, 표준편차는 31,053.230, 최소값은 101, 최대값은 373,293으로 나타났다.

예산규모는 평균이 76,674.59, 표준편차는 153,437.4, 최소값은 305, 최대값은 1,043,015로 나타났다.

[표 11]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N=96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직연령(년)	36.806	21.353	0	91
조직규모(인원)	7950.643	31053.230	101	373293
예산규모(억원)	76674.59	153437.4	305	1043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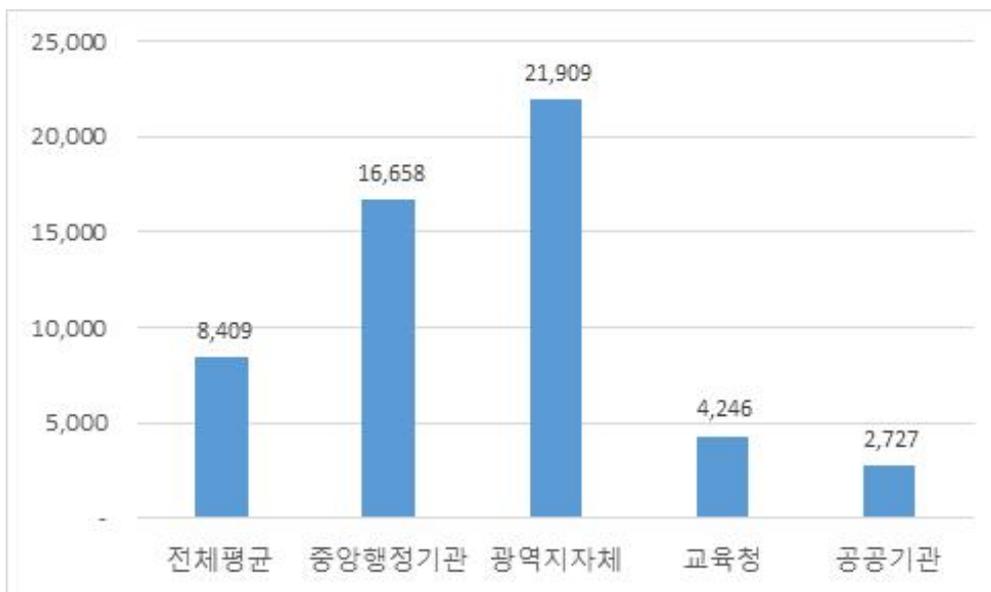
2021년 기준 조직연령은 전체평균이 39년, 중앙행정기관이 51년으로 가장 높고, 공공기관이 30년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18] 조직연령 평균값(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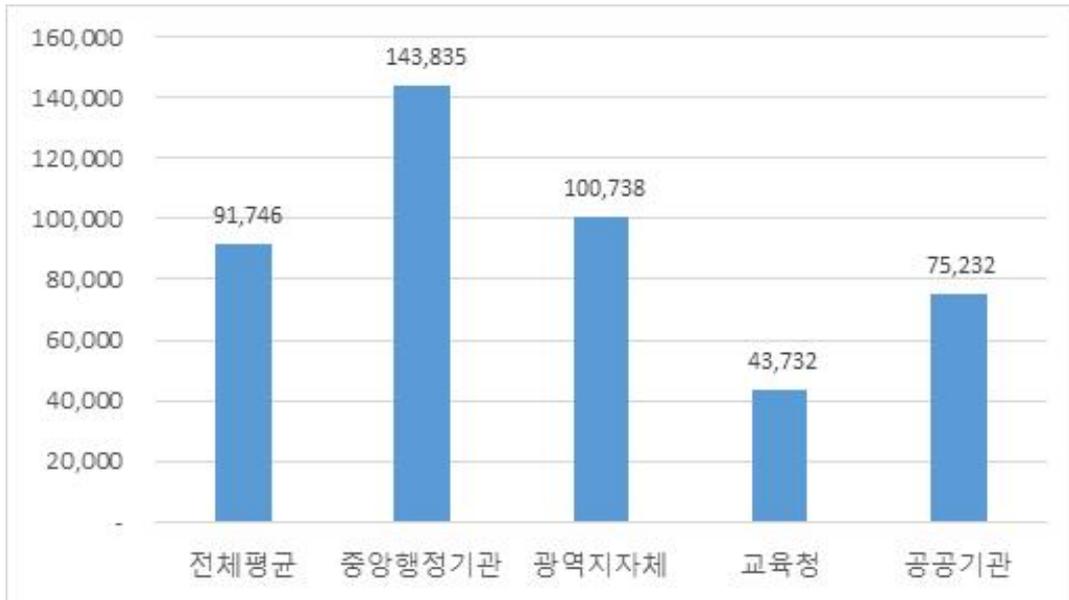
2021년 기준 조직규모는 전체평균이 84,09명이고, 광역자치단체가 21,909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이 2,727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19] 조직규모 평균값(2021년 기준, 명)



2021년 기준 예산규모는 전체평균이 91,746억원이고, 중앙행정기관이 143,835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이 43,73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20] 예산규모 평균값(2021년 기준, 억원)



제 2 절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1. 다중공선성 분석

1) 전체 공공조직

(1) 피어슨 상관관계

회귀분석 전에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다.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높아 회귀분석 시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

[표 12]는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보면 외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7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4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보공개수용률과의 상관계수는 0.0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는 -0.0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부청렴도는 내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1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공개수용률과의 상관계수는 0.1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조직규모와의 상관계수는 -0.0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부청렴도와 조직규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0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0.1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직유형과의 상관계수가 -0.1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가 0.1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1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원문공개율과 조직유형과의 상관계수는 0.2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직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1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0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유형과 조직규모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0.3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가 -0.4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3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규모와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는 0.4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는 0.642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연령과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2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결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피어슨 상관관계

구분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정보공개 수용률	원문 공개율	조직 유형	조직 규모	조직 연령	예산 규모
종합 청렴도	1.000								
외부 청렴도	0.788*	1.000							
내부 청렴도	0.452*	0.139*	1.000						
정보공개 수용률	0.093*	0.102*	-0.008	1.000					
원문 공개율	0.019	0.053	0.000	0.120*	1.000				
조직 유형	-0.027	-0.029	-0.045	-0.117*	0.227*	1.000			
조직 규모	-0.058	-0.076*	0.105*	0.028	-0.129*	-0.397*	1.000		
조직 연령	0.014	-0.015	0.057	0.152*	-0.063	-0.415*	0.416*	1.000	
예산 규모	-0.066*	-0.055	0.088*	-0.128*	-0.068*	-0.378*	0.642*	0.257*	1.000

*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2) 분산팽창계수(VIF)

실제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크거나 공차한계가 0.1보다 낮은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표 13]은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분산팽창계수가 2 이하이고, 공차한계 역시 0.5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

구 분		분산팽창계수	공차한계
독립변수	정보공개수용률	1.11	0.903781
	원문공개율	1.09	0.916181
통제변수	조직유형	1.44	0.693124
	조직규모	1.97	0.506751
	조직연령	1.36	0.737958
	예산규모	1.86	0.537637

2) 중앙행정기관

(1) 피어슨 상관관계

[표14]는 중앙행정기관의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보면 외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7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3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보공개수용률과의 상관계수는 0.2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직규모와의 상관계수는 -0.2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는 -0.3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부청렴도는 정보공개수용률과의 상관계수가 0.2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원문공개율과의 상관계수는 0.1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조직규모와의 상관계수는 -0.3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는 -0.1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부청렴도와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1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0.3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직규모의 상관계수가 -0.1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가 0.1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2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원문공개율과 조직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1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직규모와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는 0.3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는 0.4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연령과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2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결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4] 피어슨 상관관계

구분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정보공개 수용률	원문 공개율	조직 규모	조직 연령	예산 규모
종합 청렴도	1.000							
외부 청렴도	0.727*	1.000						
내부 청렴도	0.349*	-0.081	1.000					
정보공개 수용률	0.220*	0.241*	-0.079	1.000				
원문 공개율	0.111	0.157*	-0.036	0.343*	1.000			
조직 규모	-0.275*	-0.310*	0.088	-0.130*	-0.148*	1.000		
조직 연령	0.043	-0.004	0.011	0.131*	0.047	0.374*	1.000	
예산 규모	-0.300*	-0.166*	-0.136*	-0.225*	-0.042	0.496*	0.256*	1.000

*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2) 분산팽창계수(VIF)

실제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였다. [표 15]는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분산팽창계수가 2 이하이고, 공차한계 역시 0.5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

구 분	분산팽창계수	공차한계
독립변수	정보공개수용률	1.31
	원문공개율	1.24
통제변수	조직규모	1.52
	조직연령	1.24
	예산규모	1.46

3) 광역자치단체

(1) 피어슨 상관관계

[표 16]은 광역자치단체의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보면 외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8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4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내부청렴도는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가 0.3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0.2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원문공개율과 조직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3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가 -0.2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규모와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는 0.8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는 0.8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연령과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7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6] 피어슨 상관관계

구분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정보공개 수용률	원문 공개율	조직 규모	조직 연령	예산 규모
종합 청렴도	1.000							
외부 청렴도	0.826*	1.000						
내부 청렴도	0.475*	0.148	1.000					
정보공개 수용률	0.035	-0.039	0.176	1.000				
원문 공개율	0.026	0.109	-0.025	-0.238*	1.000			
조직 규모	-0.038	-0.122	0.165	-0.158	-0.306*	1.000		
조직 연령	-0.012	-0.176	0.344*	0.157	-0.232*	0.846*	1.000	
예산 규모	-0.049	-0.074	-0.119	-0.096	-0.072	0.899*	0.742*	1.000

*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2) 분산팽창계수(VIF)

실제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였다. [표 17]은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독립변수의 분산팽창계수가 2 이하이지만 통제변수 중 조직규모와 예산규모의 분산팽창계수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7]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

구 분	분산팽창계수	공차한계
독립변수	정보공개수용률	1.67
	원문공개율	1.73
통제변수	조직규모	15.04
	조직연령	3.64
	예산규모	10.25

4) 교육청

(1) 피어슨 상관관계

[표 18]은 교육청의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종합청렴도를 보면 외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83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4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보공개수용률과의 상관계수는 0.0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는 -0.0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는 내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2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는 -0.1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부청렴도와 조직규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2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가 0.4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2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0.1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직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1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가 0.1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예산

규모와의 상관계수가 - 0.3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조직규모와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는 0.8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는 0.9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연령과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7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8] 피어슨 상관관계

구분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정보공개 수용률	원문 공개율	조직 규모	조직 연령	예산 규모
종합 청렴도	1.000							
외부 청렴도	0.833*	1.000						
내부 청렴도	0.459*	0.248*	1.000					
정보공개 수용률	0.056	-0.000	-0.100	1.000				
원문 공개율	-0.075	-0.030	-0.021	-0.182*	1.000			
조직 규모	-0.146	-0.132	0.258*	-0.145	0.076	1.000		
조직 연령	0.099	0.039	0.467*	-0.097	0.028	0.805*	1.000	
예산 규모	-0.220*	-0.198*	-0.221*	-0.328*	0.144	0.952*	0.722*	1.000

*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2) 분산팽창계수(VIF)

실제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였다. [표 19]는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독립변수의 분산팽창계수가 2.5 이하이지만 통제변수 중 조직규모와 예산규모의 분산팽창계수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9]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

구 분		분산팽창계수	공차한계
독립변수	정보공개수용률	1.81	0.551203
	원문공개율	2.44	0.409011
통제변수	조직규모	31.08	0.032172
	조직연령	3.68	0.271733
	예산규모	25.29	0.039543

5) 공공기관

(1) 피어슨 상관관계

[표 20]은 공공기관의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종합청렴도를 보면 외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8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4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외부청렴도는 내부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2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내부청렴도와 조직규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가 -0.0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1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0.1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직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2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산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2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원문공개율과 조직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1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가 0.0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규모와 조직연령과의 상관계수는 0.1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0] 피어슨 상관관계

구분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정보공개 수용률	원문 공개율	조직 규모	조직 연령	예산 규모
종합 청렴도	1.000							
외부 청렴도	0.805*	1.000						
내부 청렴도	0.488*	0.215*	1.000					
정보공개 수용률	0.060	0.069	0.011	1.000				
원문 공개율	0.006	0.026	0.029	0.129*	1.000			
조직 규모	0.046	0.033	0.129*	-0.245*	-0.128*	1.000		
조직 연령	-0.028	-0.024	-0.018*	0.073	0.097*	0.194*	1.000	
예산 규모	0.032	-0.013	0.191*	-0.275*	-0.061	0.641	0.030	1.000

*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2) 분산팽창계수(VIF)

실제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였다. [표 21]은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분산팽창계수가 2 이하이고, 공차한계 역시 0.5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

구 분		분산팽창계수	공차한계
독립변수	정보공개수용률	1.19	0.840357
	원문공개율	1.07	0.937190
통제변수	조직규모	1.85	0.540995
	조직연령	1.09	0.915138
	예산규모	1.77	0.564426

2. 다중회귀분석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공공조직 전체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조직특성에 따른 정보공개 수준과 청렴도의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조직유형별로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1) 전체 공공조직

전체 공공조직의 정보공개 수준이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을, 종속변수는 종합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유형,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09**	0.003	2.68	
원문공개율	-0.000	0.002	-0.01	
조직유형	-0.021	0.015	-1.39	
조직규모	-0.039	0.029	-1.35	
조직연령	-0.000	0.002	0.19	
예산규모	-0.020	0.021	-0.96	
측정연도	2017년	0.038	0.105	0.36
	2018년	0.088	0.106	0.83
	2019년	0.141	0.106	1.34
	2020년	0.090	0.107	0.84
	2021년	0.271*	0.107	2.55
상수	2.752***	0.380	7.24	
R ²	0.024			
Adj. R ²	0.012			
F(sig.)	2.07*			
N	960			

*p<0.05, **p<0.01, ***p<0.001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2.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종합청렴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4%로 낮게 나타났다. 정보공개수용률의 회귀계수가 0.009, t값이 2.68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독립변수인 원문공개율과 통제변수인 조직유형,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는 종속변수인 종합청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공공조직의 정보공개 수준이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 종속변수는 외부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유형,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10**	0.003	3.13	
원문공개율	0.001	0.002	0.95	
조직유형	-0.028	0.015	-1.91	
조직규모	-0.058*	0.028	-2.06	
조직연령	-0.001	0.002	-0.72	
예산규모	-0.003	0.021	-0.13	
측정연도	2017년	0.028	0.102	0.28
	2018년	0.053	0.104	0.51
	2019년	0.103	0.104	0.99
	2020년	1.178	0.104	1.71
	2021년	0.225*	0.104	2.16
상수	2.622***	0.372	7.05	
R ²		0.029		
Adj. R ²		0.017		
F(sig.)		2.53**		
N		960		

*p<0.05, **p<0.01, ***p<0.001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2.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9%로 낮게 나타났다. 정보공개수용률의 회귀계수가 0.010, t값이 3.13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인 조직규모의 회귀계수가 -0.058, t값이 -2.06으로 p<0.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 변수인 원문공개율과 통제변수인 조직유형, 조직연령, 예산규모는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공공조직의 정보공개 수준이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을, 종속변수는 내부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유형,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01	0.003	-0.36	
원문공개율	0.001	0.002	0.46	
조직유형	0.001	0.015	0.05	
조직규모	0.522*	0.030	1.74	
조직연령	0.001	0.002	0.52	
예산규모	0.017	0.022	0.76	
측정연도	2017년	-0.011	0.108	-0.11
	2018년	0.007	0.109	0.07
	2019년	-0.049	0.109	-0.45
	2020년	-0.044	0.110	-0.40
	2021년	-0.005	0.110	-0.05
상수	2.533***	0.393	6.45	
R ²		0.013		
Adj. R ²		0.001		
F(sig.)		1.11		
N		960		

*p<0.05, **p<0.01, ***p<0.001

종속변수인 내부청렴도에 대한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1.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회귀모형으로 확인되었다.

2)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이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을, 종속변수는 종합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12	0.070	1.68
원문공개율		0.002	0.003	0.56
조직규모		-0.120**	0.044	-2.76
조직연령		0.007*	0.003	2.28
예산규모		-0.099**	0.034	-2.95
측정연도	2017년	-0.011	0.108	-0.11
	2018년	0.007	0.109	0.07
	2019년	-0.049	0.109	-0.45
	2020년	-0.044	0.110	-0.40
	2021년	-0.005	0.110	-0.05
상수		3.528***	0.696	5.07
R ²		0.161		
Adj. R ²		0.125		
F(sig.)		4.40***		
N		240		

*p<0.05, **p<0.01, ***p<0.001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종합청렴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6.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인 조직규모의 회귀계수가 -0.120, t값이 -2.76으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연령의 회귀계수가 0.007, t값이 2.28로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규모의 회귀계수가 -0.099, t값이 -2.95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이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 종속변수는 외부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19**	0.070	2.71
원문공개율		0.002	0.003	0.48
조직규모		-0.185***	0.044	-4.21
조직연령		0.003	0.003	1.20
예산규모		0.003	0.034	0.08
측정연도	2017년	-0.055	0.201	-0.27
	2018년	-0.044	0.201	-0.27
	2019년	0.044	0.201	0.22
	2020년	0.181	0.200	0.91
	2021년	0.123	0.200	0.60
상수		2.561***	0.700	3.66
R ²				0.154
Adj. R ²				0.117
F(sig.)				4.17***
N				240

* $p < 0.05$, ** $p < 0.01$, *** $p < 0.001$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4.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5.4%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수용률의 회귀계수가 0.019, t값이 2.71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인 조직규모의 회귀계수가 -0.185, t값이 -4.21로 $p < 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인 원문공개율과 통제변수인 조직연령, 예산규모는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이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을, 종속변수는 내부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14	0.007	-1.94
원문공개율		0.003	0.004	0.77
조직규모		0.121**	0.046	2.64
조직연령		0.001	0.003	0.32
예산규모		-0.126***	0.035	-3.60
측정연도	2017년	0.051	0.208	0.24
	2018년	-0.070	0.208	-0.33
	2019년	-0.075	0.208	-0.36
	2020년	-0.016	0.208	-0.08
	2021년	-0.089	0.207	-0.43
상수		4.377***	0.726	6.03
R ²		0.07		
Adj. R ²		0.03		
F(sig.)		1.68**		
N		240		

*p<0.05, **p<0.01, ***p<0.001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1.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종합청렴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조직규모의 회귀계수가 0.121, t값이 2.64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규모의 회귀계수가 -0.126, t값이 -3.6으로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이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을, 종속변수는 종합청

럼도를, 통제변수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41	0.074	0.56
원문공개율		0.007	0.015	0.43
조직규모		0.025	0.499	0.05
조직연령		0.003	0.013	0.20
예산규모		-0.156	0.488	-0.32
측정연도	2017년	0.002	0.360	0.00
	2018년	0.160	0.364	0.44
	2019년	0.152	0.388	0.39
	2020년	0.155	0.376	0.41
	2021년	0.368	0.390	0.94
상수		0.046	7.641	0.01
R ²			0.02	
Adj. R ²			-0.01	
F(sig.)			0.16	
N			102	

*p<0.05, **p<0.01, ***p<0.001

종속변수인 종합청렴도에 대한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0.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회귀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이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을, 종속변수는 외부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22	0.071	0.30
원문공개율		0.011	0.015	0.71
조직규모		0.067	0.484	0.14
조직연령		-0.017	0.012	-1.37
예산규모		0.109	0.473	0.23
측정연도	2017년	-0.036	0.349	-0.10
	2018년	-0.009	0.353	-0.02
	2019년	0.176	0.376	0.47
	2020년	0.073	0.365	0.20
	2021년	0.094	0.379	0.25
상수		-0.725	7.410	-0.10
R ²			0.05	
Adj. R ²			-0.06	
F(sig.)			0.44	
N			102	

*p<0.05, **p<0.01, ***p<0.001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에 대한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0.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회귀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이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을, 종속변수는 내부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102	0.062	1.65
원문공개율		0.001	0.013	0.06
조직규모		-0.652	0.417	-1.56
조직연령		0.042***	0.011	3.95
예산규모		0.154	0.407	0.38
측정연도	2017년	-0.095	0.310	-0.31
	2018년	-0.053	0.304	-0.17
	2019년	-0.129	0.324	-0.40
	2020년	-0.090	0.314	0.27
	2021년	0.129	0.326	0.40
상수		-3.640	6.384	-0.57
R ²		0.20		
Adj. R ²		0.12		
F(sig.)		2.34***		
N		102		

*p<0.05, **p<0.01, ***p<0.001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2.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내부청렴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조직연령의 회귀계수가 0.042, t값이 3.95로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규모, 예산규모는 종속변수인 내부청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교육청

교육청의 정보공개 수준이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 종속변수는 종합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35	0.027	-1.29	
원문공개율	-0.004	0.008	-0.47	
조직규모	1.024	0.738	1.39	
조직연령	0.024*	0.011	2.28	
예산규모	-1.684**	0.617	-2.73	
측정연도	2017년	0.155	0.314	0.49
	2018년	0.191	0.335	0.57
	2019년	0.441	0.344	1.28
	2020년	0.512	0.359	1.43
	2021년	0.418	0.431	0.97
상수	13.997***	3.532	3.96	
R ²	0.22			
Adj. R ²	0.14			
F(sig.)	2.61***			
N	102			

*p<0.05, **p<0.01, ***p<0.001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2.6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종합청렴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조직연령의 회귀계수가 0.024, t값이 2.28으로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규모의 회귀계수가 -0.684, t값이 -2.73으로

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규모는 종속변수인 종합청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청의 정보공개 수준이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 종속변수는 외부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56*	0.028	-2.02	
원문공개율	0.003	0.008	0.32	
조직규모	1.844*	0.746	2.47	
조직연령	0.009	0.011	0.88	
예산규모	-2.212***	0.624	-3.54	
측정연도	2017년	0.307	0.318	0.97
	2018년	0.573	0.339	1.69
	2019년	0.544	0.348	1.56
	2020년	0.799*	0.363	2.20
	2021년	0.402	0.436	0.92
상수	14.819***	3.573	4.15	
R ²			0.20	
Adj. R ²			0.11	
F(sig.)			2.24**	
N			102	

* $p < 0.05$, ** $p < 0.01$, *** $p < 0.001$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2.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수용률의 회귀계수가 -0.056, t값이 -2.02로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인 조직규모의 회귀계수가 1.844, t값이 2.47로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규모의 회귀계수가 -2.212 t값이 -3.54으로 $p < 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인 원문공개율과 통제변수인 조직연령은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청의 정보공개 수준이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을, 종속변수는 내부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25	0.027	-0.94
원문공개율		-0.006	0.008	-0.74
조직규모		-0.505	0.724	-0.70
조직연령		0.045***	0.010	4.32
예산규모		-0.004	0.606	-0.01
측정연도	2017년	-0.026	0.308	-0.83
	2018년	-0.334	0.329	-1.01
	2019년	-0.298	0.338	-0.88
	2020년	-0.070	0.352	-0.20
	2021년	-0.028	0.423	70.07
상수		7.782*	3.468	2.24
R ²		0.28		
Adj. R ²		0.20		
F(sig.)		3.53***		
N		102		

* $p < 0.05$, ** $p < 0.01$, *** $p < 0.001$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3.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내부청렴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조직연령의 회귀계수가 0.045, t값이 4.32로 $p < 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규모, 예산규모는 종속변수인 내부청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이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을, 종속변수는 종합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08	0.004	2.03	
원문공개율	0.000	0.002	-0.06	
조직규모	0.051	0.047	1.08	
조직연령	-0.002	0.002	-1.11	
예산규모	0.006	0.027	0.24	
측정연도	2017년	0.047	0.143	0.33
	2018년	0.111	0.145	0.77
	2019년	0.174	0.144	1.20
	2020년	0.062	0.146	0.42
	2021년	0.330*	0.146	2.27
상수	1.867***	0.504	3.70	
R ²		0.02		
Adj. R ²		0.00		
F(sig.)		1.16		
N		516		

* $p < 0.05$, ** $p < 0.01$, *** $p < 0.001$

종속변수인 종합청렴도에 대한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1.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회귀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이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을, 종속변수는 외부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35]와 같다.

[표 35]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08*	0.004	1.98	
원문공개율	0.001	0.002	0.32	
조직규모	0.074	0.046	1.62	
조직연령	-0.003	0.002	-1.28	
예산규모	-0.023	0.026	-0.90	
측정연도	2017년	0.020	0.138	0.15
	2018년	0.026	0.140	0.18
	2019년	0.090	0.140	0.64
	2020년	0.139	0.142	0.98
	2021년	0.292*	0.141	2.07
상수	1.987***	0.488	4.07	
R ²	0.02			
Adj. R ²	0.00			
F(sig.)	1.19			
N	516			

*p<0.05, **p<0.01, ***p<0.001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에 대한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1.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회귀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이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을, 종속변수는 내부청렴도를, 통제변수는 조직규모, 조직연령,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Coef.	S.E	t
정보공개수용률		0.006	0.004	1.50
원문공개율		0.002	0.002	1.01
조직규모		0.031	0.050	0.64
조직연령		-0.002	0.002	-0.85
예산규모		0.094***	0.028	3.32
측정연도	2017년	0.017	0.150	0.11
	2018년	0.133	0.152	0.87
	2019년	0.019	0.152	0.12
	2020년	-0.065	0.154	-0.42
	2021년	0.012	0.153	0.08
상수		1.338**	0.530	2.52
R ²		0.05		
Adj. R ²		0.03		
F(sig.)		2.50***		
N		516		

*p<0.05, **p<0.01, ***p<0.001

모형의 검정통계량은 F값이 2.5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내부청렴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5%로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보공개수용률과 원문공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예산규모의 회귀계수가 0.094, t값이 3.32로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규모, 조직연령은 종속변수인 내부청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 3 절 분석결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정보공개 수준과 청렴도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의 채택여부는 아래 [표 37]과 같다.

[표 37] 가설채택 여부

가설내용	채택여부
1.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이 높을수록 종합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2.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이 높을수록 종합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3.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이 높을수록 외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4.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이 높을수록 외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5.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이 높을수록 내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6.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이 높을수록 내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0.05 수준에서 유의함, **:0.01 수준에서 유의함

1.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과 종합청렴도의 관계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이 높을수록 종합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산출한 정보공개수용률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종합청렴도로 설정하였다. [표 22]의 가설1에 따르면 전체 공공조직에서 정보공개수용률과 종합청렴도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귀계수가 0.009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공개수용률이 1당위 증가하면 종합청렴도는 0.009 증가함을 뜻하는 것으로 가설1은 일부 채택되었

다. 그러나 공공조직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유의한 값을 얻지는 못했다.

2.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과 종합청렴도의 관계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이 높을수록 종합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산출한 원문공개율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종합청렴도로 설정하였다. [표 22]의 가설2에 따르면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은 종합청렴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3.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과 외부청렴도의 관계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이 높을수록 외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산출한 정보공개수용률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외부청렴도로 설정하였다. [표 23]의 가설3에 따르면 전체 공공조직에서 정보공개수용률과 외부청렴도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귀계수가 0.0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공개수용률이 1단위 증가하면 외부청렴도는 0.01 증가함을 뜻하는 것으로 가설3은 일부 채택되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회귀계수가 0.02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4.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과 외부청렴도의 관계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이 높을수록 외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산출한 원문공개율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외부청렴도로 설정하였다. [표 23]의 가설4에 따르면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은 외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5.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과 내부청렴도의 관계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이 높을수록 내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산출한 정보공개수용률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내부청렴도로 설정하였다. [표 24]의 가설5에 따르면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용률은 내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6.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과 내부청렴도의 관계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이 높을수록 내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산출한 원문공개율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내부청렴도로 설정하였다. [표 24]의 가설6에 따르면 공공조직의 원문공개율은 내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기관은 투명한 업무 처리로 청렴도 수준도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하에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조직의 정보공개수준과 청렴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정보공개수용률, 원문공개율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등급을 활용하여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 중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 20년 백서, 2017).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1년간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총 설문 대상자가 매년 20만명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청렴도 측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정보공개수준과 청렴도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정보공개수용률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부청렴도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적극성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정보공개수용률과 관련이 높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

개하는 기관일수록 외부청렴도 설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정보공개수용률이 내부청렴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내부청렴도가 조직문화 및 인사와 예산업무를 중점적으로 측정해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용률과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원문공개율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원문정보 공개 제도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정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정보의 ‘목록’뿐만 아니라 ‘원문’까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간 ‘청구에 의한 공개’ 중심에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행정안전부, 202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2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원문공개율과 청렴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원문공개율의 표준편차가 크고 원문정보 공개여부가 각 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기관의 청렴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조직의 청렴도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수들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수준만으로 청렴도를 규명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정보공개 수준이 외부청렴도와 종합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주인-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논의되었던 정보비대칭의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청렴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곧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조직은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정보공개수준을 높임으로써 청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원문공개율의 청렴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 원문정보공개제도는 업무 중 생산한 문서를 별도의 국민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청렴도와 간접적인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2018년부터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방식이 점수·등급 발표 방식에서 등급 발표 방식으로 바뀌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다섯 등급으로만 발표되고 있어 각 기관간 변별력이 떨어지고 개별 기관의 연도별 청렴도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웠던 점이 통계분석의 한계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향후 청렴도 측정결과 점수를 수집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각각의 공공조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분석을 실시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부 공공조직은 업무 특성상 정보공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곳이 존재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조직의 업무특성 요인까지 통제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Disclosure Level and Integrity in Public Organizations

LEE, KEE OH

Master of Public Enterprise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how much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plays a practical role in preventing corruption in line with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in 1998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national sovereignty, enhance trust in state affair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160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education offices, and public corporations, by collecting data on information disclosure acceptance rates and original disclosure rates, which correspond to the percentage of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organizations in response to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for the six-year period from 2016 to 2021, as well as data on integrity evaluation ratings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irst, the acceptance r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showed a downward trend, with the highest rate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e lowest among public corporations an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rate of original text disclosure was on the rise, with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corporations being relatively high, an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ducation offices being low. The comprehensive integrity rate showed a downward trend, with public enterprises being relatively high and education offices being relatively

low by organization type.

External integrity also showed a downward trend, and by organization type, public corporations were relatively high and local governments were relatively low. It was found that the internal integrity did not change much, and there was no clear difference by organization type.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of all public organizations, it was found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ceptance rat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prehensive integrity and external integrity, but the original disclosure rate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endent variables. Organizational size, which is a control variabl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external integrity,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nal integrity. Organizational age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endent variables, and budget siz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prehensive integrity,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nd internal integr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integrity, and the acceptance r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mprehensive integrity and external integrity, but internal integrity was not significant. External integrity is related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ceptance rate, an in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and it seems that institutions that actively disclose information disclosure claims could have received relatively high scores in the external integrity survey.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accepta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internal integrity because it focuses on

organizational culture, personnel, and budget work, which is less related to the general public's accepta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claims.

In addition, the rate of original disclosur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mprehensive integrity, external integrity, and internal integrity. This is because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rate of original disclosure is large and the decision to disclose original information is made by each organization at its own discretion, which may not reflect the integrity of the organization.

The integrity of public organizations has a complex relationship with many socio-economic variables, so the level of disclosure alone cannot be used to determine integrity, but this study found that the level of disclosure positively affects external integrity and comprehensive integr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hich plays a major role in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which was discussed as the main cause of corruption in a study based on the existing principal-agent theory.

This suggests that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integrity.

All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are constantly striving to eradicate corruption and increase the level of integrity, and as confirmed by this study,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we can increase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ctive and practical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keywords : information disclosure, integrity, transparency

Student Number : 2022-22910

참 고 문 헌(16pt)

- 곽현근. (2010). 공공부문 부패의 의의와 청렴성 제고방안. 사회과학문집, 28(2): 27-50.
- 곽형석. (2008). 정치사례 : 한국과 미국의 청렴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 권오성·황혜신·박석희·김철희. (2009). 공공기관의 책임성 유형과 우선순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51-74.
- 김상미. (2006). 지방정부의 청렴성 제고 방안: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1(2):19-59.
- 김선경·전민지. (2017). 전자정부의 투명성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3):89-109
- 김승태. (2009).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보, 23(4):119-147.
- 김용래, 정왕국 (2017).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청렴도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2(4):25-43.
- 김임정. (201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K공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결정요인. 재정학연구, 5(3):69-97.
- 김창조·정하명·손재영. (2008).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용역과제.
- 명승환. (2004).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의 문제. 한국행정연구회, 행정포커스 2004(3):29-38
- 문순영·강창현. (2012). 사회복지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및 부패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2:51-88.
- 박나라. (2017). 공공부문 투명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2010-2015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고객만족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4):219-253.
- 박홍식. (2001). 투명성 가치: 개념적 구조와 의미.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2(3): 103-118.
- 박홍식·나현. (2010).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투명성 효과. 행정논총, 48(4):385-408

- 서인석·박형준. (2012). 거래비용관점에서의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의 관계. 「한국정책학보」, 21(3): 291-324.
- 송희준. (2002). 전자정부사업의 행정투명성 제고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0(4): 109-134.
- 송희준·최홍석. (2002).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효과: 현황과 전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337-358.
- 송희준·김은정·권호진·유효정. (2012).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 제도와 운영실적의 비교 연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1):289-312.
- 신상훈, 이세철. (2015). 조직의 청렴도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회계정보학회. 33(2): 1-20.
- 신승윤, 한익현. (202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반부패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60(2): 143-180.
- 신현태, 오영민, 이현국 (2020). 지방공공서비스 성과정보가 관료의 서비스 성과공개 및 시민참여 강화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투명성 강화기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9(3): 43-76.
- 안병철. (2009).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행태 분석: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2002-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113-160.
- 유은철, 유홍림(201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관리 특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분석”, 한국행정연구,23 (3), 55-79.
- 이근주. (2003). 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컨퍼런스 자료, 127-143.
- 이명진·문명재. (2010).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4(1): 121-146.
- 이명희. (2004). 중앙 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정보서비스 평가: 정보공개와 이용자참여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2): 195-218.
- 이상범. (2012). 공공기관 청렴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청렴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수. (2004). 행정 투명성 측정과 평가를 통한 부패통제 전략: 행정부패추진모형의 재설계와 광역자치단체 실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8.
- 이상철·성도경. (2002).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성공요건분석. 「한국행정학보」, 36(4):303-320.
- 이재완·정광호. (2011).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청구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33-452.

- 이정주(2016), 선순환적 부패통제메커니즘의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1(1), 99~122.
- 이현영·정연경. (20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97-114
- 임상규. (2008). 광역자치단체의 전자정부구축효과에 관한 연구 - 투명성 증진을 통한 부패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5:341-356.
- 장지원·문신용. (2004). 행정정보공개와 관련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연구, 13(1): 170-202.
- 장용석·송은영. (2008). 한국사회 투명성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사회학, 42(7):146-177.
- 최진욱. (2007). 서울특별시 OPEN 시스템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정부학연구」, 13(1): 215-241.
- Banisar, D. (2006). Freedom of information around the world 2006: A global survey of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laws. Privacy International.
- Botchwey, K. (2000). Fighting Corruption, Promoting Good Governance: Commonwealth Expert Group on Good Governance and the Elimination of Corruption.
- Birkinshaw. (2006). Freedom of information and openness: Fundamental human rights. Administrative Law Review, Winter2006, Vol. 58,
- Cucciniello, Nasi. (2014). Transparency for Trust in Government: How Effective is Formal Transpar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7 (13), p.911-921
- Hoekstra, A., Belling, A., & van der Heide, E. (2008). A paradigmatic shift in ethics and integrity management within the Dutch public sector? Beyond compliance - a practitioner's view. Ethics and Integrity of Governance: Perspectives across Frontiers. Cheltenham, UK: Edward Elgar.
- Langseth, P., Stapenhurst, R., & Pope, J. (1997). The role of a national integrity system in fighting corruption. Commonwealth Law Bulletin 23(1-2): 499-528.
- Kickert, W. (1997). Public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reform in Western Europe. Edward Elgar Pub.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통합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공공기관 알리오. <http://www.alio.go.kr>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 <http://data.mois.go.kr/>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fiscaldata.go.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